

“U대회 양궁장, 광주FC 전용구장 활용”

姜시장 시민과 대화 “체육관·수영장·양궁장 区별 1곳씩”

광주시가 2015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에 대비해 신축하는 양궁장을 대회 이후 광주FC 전용연습구장 및 시민구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다목적 체육관·수영장·양궁장 등을 차지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차지구마다 1곳씩 배정하는 암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방없이 비교적 낮 곳에 광주FC 전용구장을 건립해 광주U대회 때 양궁장으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축구장으로 쓰는 방안을 생

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축구타운을 광산구에 건립해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체육관·수영장·양궁장 중 1곳은 광산구로 갈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양궁장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770억원, 600억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새로 짓는 양궁장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주 FC 연습구장 및 시민구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민선 5기 1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광주U대회 경기장 입지와 관련해 ▲ 지역 간 균형발전 ▲ 재정부담 최소화 ▲ 시민이용 편의성 ▲ 대회 이후 운영 감안 등 4가지 조건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부지매입비의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으며, 대규모 시설 유지비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입지 결정에는 부지 가격과 대회 이후 활용 등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 시장은 “애초 계획에는 체조선수들이 쓸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비행장 주변에 들어서게 돼 있는 등 부지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있다”며 “잘못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으며, 한번 결정된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 당시 광산구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의 입지는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를 광주U대회 시설 입지를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차지구 간 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함평천지 한우 맛 보려…

지난 2일 오전 함평군 엑스포공원 앞 광장에서 ‘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및 할인행사’를 개최한 함평군이 관광객 500명에게 국거리용 함평천

취급소에서 함평천지 한우고기를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조합원’ 분양 신청…7일부터 한달간

시 “100% 신청 기대”

2015년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시 서구 화정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4일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7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으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을 거부하고 현금 청산을 받을 조합원이 10%를 넘을 경우 광주도 시공사가 초과분을 인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조합원 분양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선수촌 조성사업의 첫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3일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 지난달 15일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조합원 분양계획을 수립해 4일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는 59㎡ 390세대, 84㎡ 3,126세대, 101㎡ 210세대 등 분양면적과 세대, 분양 대상 대지 및 건축물, 개략적인 분담금, 분양신청자격 등이 명시돼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은 7일부터 한 달간이며, 분양을 받을 조합원은 분양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기간 내에 조합사무실에 제출하

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지난달 15일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조합원 분양계획을 수립해 4일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재건축 방식으로 건립하는 화정주공아파트는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대 19만4496㎡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15층~33층, 35개동 모두 3720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2012년 4월 내 착공해 201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감사원 오늘부터 140명 투입

최근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향응 수수 등 공직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 기강 확립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감사원도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오는 4일부터 공직감찰본부와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인력 140여 명을 투입,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통상 공직기강 점검 70명 인력의 역할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규모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민원 등을 종합 분석해 4개 분야 12개 유형으로 나눠 집중 점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어촌公 ‘J프로젝트’ 박지사 발언 반박

“감정평가 토대로 땅 양도” 입장 재확인

영암·해남 관광재자원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박준영 전남지사의 “J프로젝트 포기 검토” 발언에 대한 반박성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주장은 재차 강조하는 등 전남도와 시각차가 혼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박 지사, J프로젝트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J프로젝트 사업구역에 대해 협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승인을 거쳐 추진한 사업인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박 지사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공사는 또 “영산강 III지구 간척지 내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성·삼포(F1경주장부지포함)·삼호지구는 정당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양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사측은 F1 경주장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F1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와 감정평가조간에 대해 감정평가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카보가 새로운 감정평가기관을 내세우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비판했다.

‘새만금에 투자를 모으기 위해 J프로젝트를 놓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농어촌공사측은 “구성·구성 평가에 대한 조속한 신뢰성 확보와 F1 경주장 부지에 대한 양측 합의에 근거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전남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전남도와 협력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부가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간 중재에 적극 나서 사업이 제 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러나 오는 8월 19일까지가 임기인 김 총장이 이미 지난달 30일 사의를 반려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퇴를 강행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사퇴 의사를 유보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자리에 남아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후임 검찰총장을 낙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김 총장에게는 후임자가 정해지는 시점에서 총장 직무대행체제를 만들어놓고 조직을 떠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도 ‘명품 대학촌’ 만든다

22개 대 2016년까지 주변환경 개선 프로젝트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종·장기적으로 분류해 2016년까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 주변 특정 구역을 ‘대학촌’으로 지정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애와공연장·문화센터·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꽤적인 주거·편의시설을 보강하면서 유 흥업소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미 전남발전연구원에 의해, ‘대학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놓은 상태로, 응의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해 유 흥주점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시설의 건축 인·허가를 염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준규 총장 막판 고심…사퇴 무게

MB 반대…후임 인선때까지 남아 사태 수습도 고려

김준규 검찰총장이 거취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밝혔던 대로 4일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끝까지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

을지고 흘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는 방안에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혼란으로 어지러워진 검찰 조직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정주조합 2011-04호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 내용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오니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분양신청기한”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분양당사자에 제외되어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유의하여 주시고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① 대지 면적 : 156,561.00㎡ ② 건축 면적 : 29,216.95㎡ ③ 건축연면적 : 584,248.08㎡.
④ 건폐율 : 18.69% ⑤ 용적률 : 268.89%
⑥ 주택의 규모 및 대체건설계획 : 지하2층, 지상15층~33층 / 35개동 아파트(3,7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절비사업자의 종류·명칭 및 절비구역의 위치·면적
① 면적 : 화정주공아파트주체재건축조합비단지사업자.
②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원
③ 면적 : 194,492.00㎡.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① 기간 : 2011년 7월 7일(월) ~ 2011년 8월 7일(일) 32일간(토·일요일 신청 가능)
② 분양신청장소 : 화정주공아파트주체재건축조합 사무실
우편번호 501-76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31-7번지(2층)

4. 분양대상 대상 또는 건축을 내역
① 대지

분양구역(면적)	공급 대상 대지	공급 시설	계
(25평형)	B1(187)	390	156,361.00㎡
(20평형)	A1(217)	3126	35,131.00㎡
(34평형)	B-1(311)	3,726	194,492.00㎡

② 건축 면적 내역(※※ 내역은 사업시행인가 내역이며, 사업시행인과 변경 사유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급구역(면적)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기타공용면적(㎡)	계
59평(A-187)	390	84,800	20,012	115,888
60평(B-201)	3126	84,920	14,486	100,406
62평(A-217)	3,726	84,944	28,011	112,955
63평(B-212)	3,726	84,975	28,022	112,997
65평(C-188)	210	84,975	28,331	113,306
66평(DC-352)	210	84,975	28,020	112,999
67평(E-65)	101,96	84,975	30,611	115,387
68평(B-51)	101,93	84,975	30,600	112,335

③ 분양대상 면적 및 계

지상	지하	지하층	계
2층	2층	2,026.52	6,090.33
3층	3층	4,001.31	7,632.35
지하1층	지하2층	1,542.02	1,542.02

* 단지별로 공급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나, 분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신청자격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분양신청자격의 제출
② 증거부증명, 입증증명서, 주민등록증등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제출(합부서류는 분양신청서 하단 참조)
③ 직접신청, 대리신청, 등기권위증명서(우편) 제출은 분양신청 기간이 도래하거나 또는 분양신청기간에 발송됐을 경우 증명되어야 함

7. 토지등권유자와 권리자와 권리신고법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권리·권리신고증 등에 신고제출 한도수준 청탁 청탁금지법에 정한 제출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